

# 이슈브리프

No. 2026-02(S)

## 동맹 시험대: 그린란드 위기와 한국에 대한 함의

김세미

연구위원

2026-04-01

### I. 서론

2026년 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 의사를 다시 제기하면서 NATO 동맹국들 사이에 큰 우려가 확산되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언급했던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 구상을 다시 강조하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북극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럽 전역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덴마크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덴마크 주권에 대한 어떠한 강압적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트럼프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이하 뤼터)와의 논의를 통해 “향후 합의를 위한 틀”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은 이미 대서양 동맹 내부에 상당한 불안을 야기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위기는 NATO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미국이 NATO 동맹국의 영토에 대해 정치적

압박이나 군사력 사용 위협을 고려하게 되었는가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그린란드 사태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 변화라는 더 큰 흐름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이 공동 안보 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발언은 유럽의 집단안보 기여 부족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이 위기는 유럽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동맹 내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사태는 한국에게도 동맹 관리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준다.

## II. 왜 그린란드가 2026년의 쟁점이 되었는가

트럼프가 2026년에 다시 그린란드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지난 10여 년간 심화되어 온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린란드가 북미, 유럽,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북극 항로가 만나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새로운 해상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은 핵심 해상 교통로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와 가까워 국토 방어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점이다.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현재 그린란드에 구축된 미국의 조기경보 시설 역시 미사일 탐지와 우주 감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북극 지역에서의 미·중·러 경쟁 심화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부 해안선을 따라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북극 항로에 대한 규제권을 강화해왔으며, 중국은 스스로를 “준(準)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로 규정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과학 활동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미국의 방위 전략에서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요인들만으로는 왜 그린란드가 2026년에 정치적 쟁점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에서는 유럽 동맹국들이 정치적 지지는 표명하지만 이를 지속적인 군사 기여나 장기적 방위 투자로

연결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린란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극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유럽 동맹국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기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덴마크와 북유럽 국가들이 북극 방위, 감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내 정치도 중요한 배경이었다. 미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으며, 동맹 관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오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과도하게 누리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맞물려 호응을 얻었다.

### III. 유럽의 전략적 딜레마

그린란드 논란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매우 미묘한 균형 위에서 이루어졌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의 주권과 안보가 강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유럽 안보의 핵심 보장자인 미국과의 갈등은 피하려 했다.

덴마크는 이번 위기의 중심에 있었다. 그린란드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자치령이지만 여전히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서 덴마크의 주권 아래에 있다. 따라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은 덴마크의 영토 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덴마크는 NATO를 통한 안보 보장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내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 및 우주 감시 시설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에 과도하게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경우 덴마크 안보의 핵심 축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거나 양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단호히 부정하면서도, 북극 안보에서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는데, 이들은 노골적인 군사적 대응 대신 상징적인 군사 배치와 외교적 메시지를 결합해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덴마크는 여러 유럽 국가들과 함께 그린란드에서 '아틱 인듀어런스 훈련(Operation Arctic Endurance)'을 실시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다수 국가의 공동 참여를 통해 강압적 행동이 곧 여러 유럽 국가들을 동시에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럽 지도자들 또한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신호를 강화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하 마크롱)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은 괴롭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더 강한 유럽 방위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IV. 그린란드 위기가 보여주는 미국의 동맹 기대 변화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위기는 NATO의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이를 관철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두 가지 변화가 두드러진다. 첫째는 동맹국들의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인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린란드 사례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수준뿐 아니라 그러한 기대를 전달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전 이후 오랫동안 미국은 동맹 내 핵심 안보 제공자로서 협의와 제도적 절차를 통해 동맹 결속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그린란드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조율을 넘어 압박과 강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덴마크의 북극 안보 투자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동맹국들의 의지를 시험하는 사안으로 격상시켰다.

실제로 워터는 향후 합의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NATO 차원의 노력을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그린란드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대응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즉, 전략적 이슈가 외부 위협 대응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동맹 내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인식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이 집단방위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 강화되었다. 반면 유럽은 미국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해 점차 더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과의 갈등은 피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대미 의존의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 논의되어 온 '전략적 자율성'은 최근 방위뿐 아니라 기술, 공급망, 경제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마크롱이 "주권 있는 유럽"을 강조하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유럽은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뤼터는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유럽이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과 핵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그린란드 위기는 단순한 북극 영토 분쟁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하고 유럽이 이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 V.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그린란드 사태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 상황은 다르지만, 이번 위기가 보여준 미국의 기대 변화, 동맹 신호, 부담 분담 문제는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이번 사태는 명확하고 일관된 동맹 신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맹은 단순히 조약이나 제도적 약속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공동의 안보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도 달려 있다.

미국은 유럽이 집단안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해왔으며, 트럼프의 접근은 "유럽 동맹국들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행동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워싱턴이 한국이 북한 억제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선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기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이다. 미국이 여러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엄격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입장, 북한 억제 역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참여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동시에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방위비를 증액해왔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조선업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 목표를 위한 기여로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유럽의 대응은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이견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덴마크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주권 문제에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억제력과 연대를 강화했다. 이는 한국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VI. 결론: 그린란드와 미국 동맹의 미래

겉으로 보기에 그린란드 위기가 북극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자 NATO 내부의 위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더 큰 의미는 미국이 동맹과 동맹국의 책임을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 체제의 핵심 안보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은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공동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린란드 논란은 부담 분담에 대한 불만과 동맹국들의 기여 부족에 대한 인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린란드 사태를 NATO가 내부 분열로 가고 있거나 미국 동맹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는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 내 기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긴장은 그린란드나 북극 문제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쿠바, 서반구 전반에 대한 미국의 관여 등 다른 전략적 사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국의 기대를 관리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여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 억제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기대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집단적이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저자

**김세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유럽관계,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중견국외교 등이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원에서 비상임 펠로우,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상임 펠로우, 미국 퍼시픽 포럼에서 상임 펠로우로 재직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학 학사,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6-02).**

("Testing Allies: The Greenland Crisi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ttps://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_eng&wr\\_id=284](https://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_eng&wr_id=284))